

중소기업 정전사태 피해액 300억원

대구·경북 2128곳에 서울 80억원 ... 소상공인 포함하면 눈덩이 가능성

9월15일 발생한 정전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이 9월19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중소기업 피해액은 4588사에 301억9100만원으로 추산됐다.

대구·경북이 절반 가량인 2128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1093곳), 인천(320곳), 부산·울산(262곳), 대전·충남(161곳), 경기(154곳), 경남(131곳), 전북(130곳), 충북(77곳), 강원(72곳), 광주·전남(60곳) 순이었다.

피해액은 서울이 80억2000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대구·경북(76억900만원), 부산·울산(50억4700만원), 대전·충남(21억3500만원), 충북(15억1800만원), 경기(13억300만원), 경남(12억4500만원), 전북(10억4900만원), 인천(9억원), 광주·전남(7억3000만원), 강원(6억3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피해액은 중기청이 유관기업의 협조를 받아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소상공인은 집계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9월20일부터 10월4일까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받으면 피해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 의원은 “피해 중소기업들이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자금 만기연장과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0>